

피랍선원 전원 구출

긴박했던 ‘아덴만 여명작전’

함포·헬기 측면 지원…갑판서 치열한 총격전

청해부대가 21일 해적에 납치된 상호주얼리호를 구출하기 위해 감행한 ‘아덴만 여명작전’은 4시간58분 동안 긴박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해적 13명과 선원 21명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선부는 군사작전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군은 6단계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작전 승인을 건의했고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20일 오후 5시12분 대통령의 정식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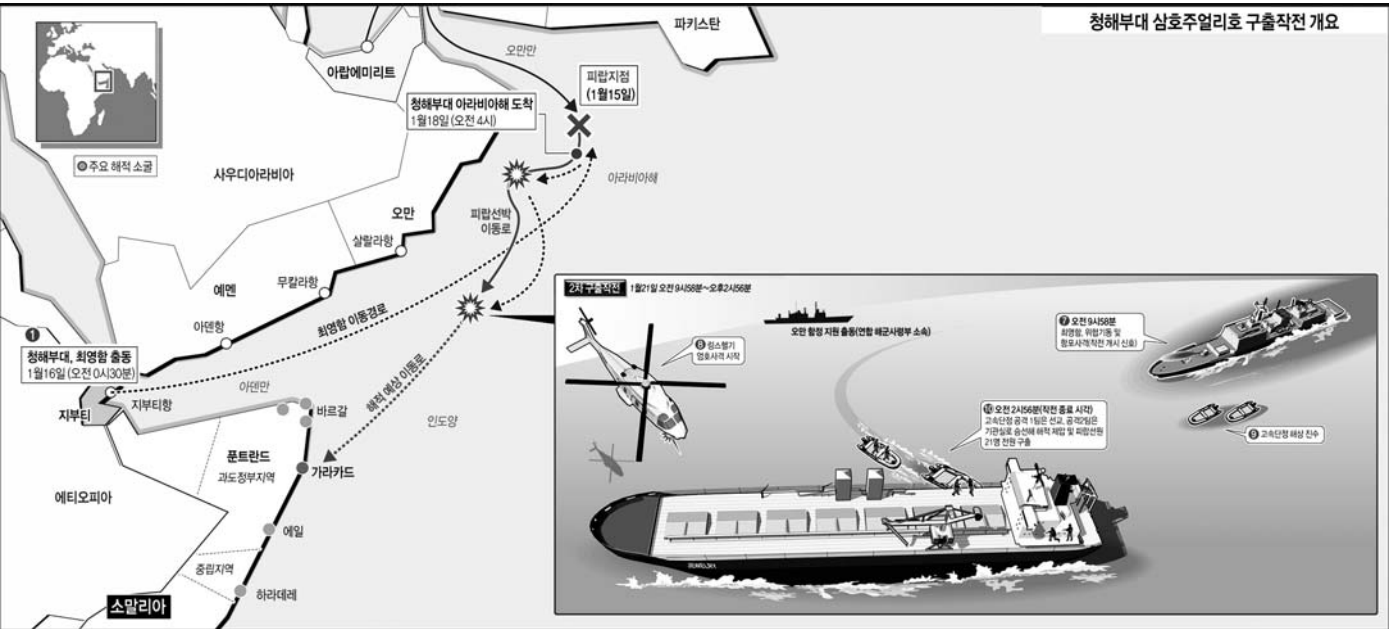
작전은 새벽 여명이 밝아 오는 오전4시58분(한국시간 9시58분)에 개시됐다. ‘아덴만 여명작전’이란 작전명대로 해적들이 잠에 취해 있을 시간대를 작전 개시 타이밍으로 정한 것이다. 이성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은 “링스헬기가 출동하고 고속단정 3척이 기동해서 기습적으로 선박을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해적들의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최영함(4500t급)의 5인치 함포가 먼저 불을 뿜었다. ‘광~광’ 수발의 함포 소리에 놀란 해적들은 잠에서 깬 채 우왕좌왕했고 이 틈을 노리고 링스헬기가 출동했다.

링스헬기 또한 해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K-6 기관총 수백 발을 선교 등으로 발사했다. UDT 작전팀의 안전한 승선을 위해 선교에 있던 해적들을 선실내로 몰아넣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링스헬기에 탑승한 저격수가 저격용 소총으로 선교에 있던 해적 1명을 조준 사살하자 해적 5~6명은 혼비백산하며 선실로 대탈했다.

링스헬기에서는 우리 말로 “지금 진입 작전



이 시작됐다. 선원들은 전투 바다에 앞드러라”고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했다.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 해적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저격용 소총 등으로 무장한 2개 UDT 작전팀 20여명이 선교를 장악하고 이어 선교 하단으로 진입해 격실과 기관실 등 57개 격실을 차례로 장악해 나갔다. 장악된 격실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x’표시를 하면서 진행했다.

AK 소총과 기관총, RPG-7(휴대용 로켓)으로 무장한 해적들은 저항하다가 사살되거나 투항해 생포됐다. 작전 끝 무렵에 해적 4명이 AK 소총을 발사하며 끝까지 저항하면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적 2명은 죽고 2명은 생포됐다.

작전 종료 결과 해적 13명 가운데 8명은 사살되고 5명은 생포됐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다. 선원 20명은 안전하게 구출됐지만

선장 석모(58) 씨가 부상했다. 성공적인 작전을 펼친 것이다.

UDT 작전팀 전원은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헬멧을 착용하고 작전에 투입됐다.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은 국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 군사지휘본부로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작전팀이 바라보는 물체와 현장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어 합참 주요 관계자들도 앉아서 작전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데는 선장 석 씨의 도움도 컸다고 합참은 전했다.

해적들은 배를 남치해 빨리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선장이 기지를 발휘해 선박을 지그재그로 기동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특히 청해부대는 소말리아함으로부터 해적의 모선이 합류하기 위해 출항한다는 첩보를 미군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해적들이 추가 합류

■상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시간대별 상황

15일 12:40	한국인 8명이 승선한 상호주얼리호 해적에게 피랍
16일 00:30	청해부대 최영함 지부타항에서 피랍해역으로 출동
18일 04:00	청해부대 피랍해역인 아라비아해 입구 도착
18일 20:00	몽골 선박 추가 피랍 저지 및 1차 진입 작전 (해적 수명 총격으로 실종되고 우리 해군 3명 부상)
19일 03:25	이란 국적의 미상 선박 상호주얼리호로 접근
19일 10:20	오만 해군 함정 작전 지원차 도착
19일 11:40	상호주얼리호 3노트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
19일 13:20	상호주얼리호 6노트 속도로 소말리아(남쪽) 방향으로 이동
19일 12:46	이란 국적 미상 선박 탐색 작전 실시 ~13:33
19일 오후	해군 부상자 3명 오만의 한 병원으로 후송. 이란 국적 미상 선박 해적과 연관 있어 혼란 조치
21일 09:58	청해부대 상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개시
21일 14:56	해적 전원 제압하고 선원 21명 모두 구출

하먼 작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작전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더이상 시간을 끌면 구출 작전이 어렵다’는 판단대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으로 설계됐다.

최영함은 적의 함정.잠수함을 격침하고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다. 링스헬기 1대, 고속단정 3척이 탑재돼 있고 고속단정에는 1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시설

‘나홀로 가구’ 급증 추세, 정부 지원책 내놔야

광주·전남에서 독거 노인 등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30만을 넘어섰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독거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결혼 기피와 저출산, 이혼 등 세태의 변화에 따라 독신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복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전체 67만1758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18만9671가구(28.2%)로, 16개 시도 중 경북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5년 전 1인 가구 비율(24.6%)에 견주어 무려 3.6%포인트가 증가했다.

광주지역도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가 크게 늘어 전체 51만3871가구 중 23.4%인 12만128가구에 달했다. 5년 전 19.0%보다 무려 4.4%포인트나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독거 노인들은 젊은 층과 달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빈곤과 고독에 시달리고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건강 관리도 잘 되지 않는다.

경기 침체와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독신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독신자 증가는 결혼 기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악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보건·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독신자가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결혼 후 출산, 육아문제 등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 쇄신 기대했는데 ‘爲人說官’이라니…

〈위인설관〉

광주시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일 현재 1담당관, 2국, 10과 48팀 체제를 2담당관, 2국, 9과, 44개팀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신임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의 개혁성향이라는 점에서 조직쇄신이 기대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쇄신 및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다. 우선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자리를 놓고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새로 신설된 정책기획담당관은 교육감의 공약을 실천하고 행정업무를 조정·관리한다고 한다. 마치 대기업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일사불란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도 일개 지방교육 행정에 이 같은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조직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자칫 공조조직을 무력화해 더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자리가 특정단체 인사를 얹어 교육감의 진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청산되어야 할 ‘구태(舊態) 정치’ 답습의 다름이 아니다.

최근 시 교육청은 사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를 둘러싸고 ‘둘러먹기’란 비판에 휩싸였다. 장휘국 교육감의 앞으로 행보를 짐작할 수 있는 첫 인사부터 잡음이 새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장 교육감은 지역민이 무엇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만사(萬事)라는 인사부터 빠지기려면 지역교육의 앞으로 4년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상득 의원 ‘형님 본색’ 이제 그만”

민주·광주시 정책협, 과학벨트 포항유치 의혹 비판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정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포항 유치 의혹’과 관련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최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과학벨트 정치로 풀면 안 된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 “‘불리하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유리하면 정치적으로 안 된다’고 말한다”라며 “이 의원에게 ‘대통령 형님으로 해야 할 일을 넘어서고, 다른 지역도 생각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이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이 의원이 대통령 형님으로, 그만쯤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하는 게 순리”라며 “과학벨트를 ‘형님벨트’로 만들려는 욕심을 내면 향후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요즘 한파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호남은 더 춥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호남 배제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형님’이 없다 보니 당연히 받아야 할 것도 못 받고 진행되어야 할 사업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상득 의원이 언론을 통해 ‘과학벨트는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말 그대로 과학벨트에 대한 ‘형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요즘 ‘형님 본색’ 시리즈가 너무 오래가서 지겹다. 과학벨트는 원래 하기로 했던 곳에 반드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영화 ‘친구’의 대사를 인용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비교했다. 그는 “포항지역에 과학벨트를 뺏아가려는 이상득 의원과 한나라당을 보면 영화 ‘친구’의 대사가 생각난다”라며 “‘이제 고마해라(그만해라). 많이 먹었다(먹었다) 아이가(아니냐)’”라고 비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GS칼텍스 정상 가동

여수국가산업단에 발생한 정전사태로 작업이 전면 중단됐던 GS칼텍스 공장이 정전 사흘 만에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GS칼텍스는 지난 17일 발생한 정전으로 산단 내 20여 곳 공장과 함께 가동이 중단됐던 GS칼텍스 1, 2공장이 복구작업을 끝내고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17일 오후 4시8분 발생한 정전으로 일시 또는 전면 작업이 중단됐던 산단 내 총 23곳 업체 중 이날까지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한 업체는 삼남석유화학 1곳만이 남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심각한姜시장

21일 광주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민주당 정책협의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광주시의회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삼질江山’ 됐으니...

민주, 과학벨트 놓고 호남·충청 감정 대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첨예한 감정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것은 물론 이미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강력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뒤늦게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드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당내 분열만 가속시켜 오히려 여권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이 과학벨트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분당’까지 거론하는 등 감정적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실제로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 20일 박지원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호남권 의원들을 집중 성토했다는 물론 며칠 전에는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에게도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 국회의원들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과학벨트 입지가 정해지면 되는 것이지만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탈당’까지 언급하며 정치적 압박에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이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데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과학벨트가 광주·전남 지역에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가끔씩 ‘탈당’을 운운하는데 정치적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호남권과 충청권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